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7

통권 28호

July 2007

| 이달의 이슈 |

소상공인 육성 방안

이윤보(건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경제포커스 |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실태와 정책과제

전인우(중소기업연구원 산업연구팀 연구위원)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의 특례보증자금 지원효과

신창호(서울시장개발연구원 산업센터장)

| 생생리포트 |

서울시 개인파산에 대한 심층의견조사

박지희(서울시장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연구원)

박희석(서울시장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부연구위원)

| 자치구탐방 |

「가재울뉴타운추진사업」에 따른

주변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윤내원(서대문구청 재정경제국장)

| 경제동향 |

경기/고용/부동산/금융

| 부록 |

통계표

서울경제

2007. 7

차 례

이달의 이슈	3	소상공인 육성 방안 이윤보(건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경제포커스	11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실태와 정책과제 전인우(중소기업연구원 산업연구팀 연구위원)
	25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의 특례보증자금 지원효과 신창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센터장)
생생리포트	39	서울시 개인파산에 대한 심층의견조사 박지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연구원) 박희석(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부연구위원)
자치구탐방	59	「가재울뉴타운추진사업」에 따른 주변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윤내원(서대문구청 재정경제국장)
경제동향	69	요 약
	70	경 기
	78	고 용
	86	부동산
	94	금 융
부록	107	통계표

소상공인 육성 방안



이윤보*

건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yblee@konkuk.ac.kr

들어가면서

많은 미래학자들은 '21C'는 글로벌화의 진전과 산업의 분업화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시대가 도래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측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예만 보더라도, 이미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하여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고용, 생산, 매출, 이익 등이 대기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또는 그 이상이다.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특히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증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육성책이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일본 쓰쿠바대학 박사
- (현)특수법인 소상공인진흥원 이사장
- 한국·미국·일본의 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연구원)
- 일본의 중소기업혁신 관련법에 관한연구(중소기업청)

고용창출 및 혁신과 자아실현의 주체

우리나라 소상공인 사업체는 약 268만여 개로 전체 사업체 수의 8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는 521만여 명으로 전체 종사자 수의 43.3%로 국민경제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사회적 분업의 저변형성, 고용창출, 산업평화에 기여, 혁신자로서의 역할, 새로운 산업분야의 개척 등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사업체는 규모의 영세성 등의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구인난, 신용 및 담보부족에 따른 금융기관의 소외, 시설의 낙후와 전근대적 경영방식 등이 그러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사업체에 대한 정부주도의 직접지원에 의한 방식으로는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이보다는 간접지원 방식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자원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한계 소상공인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고, 일반형 소상공인의 혁신을 유도하여 구조개선의 기틀을 마련하며, 소상공인이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개정된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나타나 있으며, 개략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상의 육성시책

우리나라 소상공인정책은 지난 1997년 4월,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여기에다 2005년 5.31대책을 통해 컨설팅,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정책 등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 지원노력을 하고 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2에서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육성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공동사업, 사업전환, 사업장이전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경영개

선 상담 및 자금, 인력, 기술, 판매, 수출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또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제공·교육 및 상담, 지역상권 조사분석, 소상공인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하고 있으며, 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나아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지원원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조사 및 개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소상공인 창업과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소상공인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과 보급 및 점포개선, 소상공인의 기술개발 지원 및 업종 간의 교류지원, 그 밖에 소상공인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육성방안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보는 시각은 주로 ‘경제적 약자’ 등 소극적인 입장에서 논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육성이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강조되어야 함은 물론 대외적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활력과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고학력자의 양산 등으로 저임금, 취약한 근로환경의 소상공인 구인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원 등의 증설과 증원 등을 통한 전반적인 인력의 공급확대, 주부 및 노령인구와 같은 유희인력의 활용대책 강구 그리고 이직을 방지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고용안정대책을 소상공인의 실정에 맞도록 개선,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병역특례업체의 선정기준을 개정하여 건설하고 유망한 소상공인에도 해당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인력난 해소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자금지원의 강화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신용 및 담보부족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소상공인 자금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중소기업 의무대출제도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세분화하여, 기존의 총괄적 지원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상대적 소외를 극소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대출간소화와 신용대출의 확대 추진을 통해 자기신용 부족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재무회계가 미비한 소상공인을 감안하여 서류중심의 심사에서 현장중심으로 전환을 통해 사업성이 유망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

셋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지역의 자연조건 및 사회적, 경제적 특성과 직·간접인 관계를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에 중요한 기반이 되며, 지자체의 재정 자립에도 크게 기여한다. 따라서 지역 기반 소상공인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우선적 자금지원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상공회의소, 지방의 소기업소상공인위원회 등은 경영 및 기술지도사업, 정보의 제공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넷째, 조직화와 협업화의 조직활동을 강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기업규모의 영세성에서 오는 구조적인 불리함으로 인해 원자재 구매나 제품판매에 있어 대금결제, 단가결정, 적정량의 구매 및 조달시기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자재의 공동구매와 제품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조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동조합, 연합회, 협회 등의 가입을 권장하는 한편, 영세 소상공인들이 조합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도 필요하다. 또한 해당조합, 연합회, 협회가 없어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신규조합연합회협회 등의 설립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조직 확대방안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소상공인의 시설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입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전근대적인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력 확보차원에서도 시설현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상공인의 대부분은 모든 경영자원측면에서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1차적인 문제해결책은 소상공인 스스로 해결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정부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생

력화를 위해서라도 정부차원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활동 지원책과 마케팅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판로개척이나 시장개척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소상공인제품 구매의무화, 소상공인 제품개발에 대한 대규모 기업의 진입금지, 특허제도의 강화와 모방제품의 고립화, 소상공인 유통점의 전문화 지원, 소상공인 판로센터의 설립, 소상공인제품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전담기관의 설립 등이 요구된다. 또한, 한계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전환 및 퇴출제도 등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소상공인 육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앞으로는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복지적 측면으로의 소상공인 육성책도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SDI**